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학술회의
초국적 공론장의 일본군 '위안부' 이슈

2021년 12월 10일(금) 14:00-18:00

동북아역사재단 중회의실

학술회의 프로그램

개회 및 인사말	14:00-14:10	남상구(연구정책실장)
제 1 부	14:10-15:55	사 회 김영숙(재단 연구위원) 발표1 '램지어 사태' 이후 한국의 '위안부' 연구 및 논의 변화 박정애(재단 연구위원) 발표2 영어권의 일본군'위안부' 연구와 초국적 기억 김은경(한성대 교수) 발표3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베를린 소녀상 소고 정용숙(춘천교육대 교수)
	15:55-16:10	휴 식
제 2 부	16:10-17:50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토 론 염운옥(경희대 글로벌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헌미(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교육홍보팀장) 허윤(부경대 교수) 발표자 전원

목 차

발표1	‘램지어 사태’ 이후 한국의 ‘위안부’ 연구 및 논의 변화 박정애(재단 연구위원)	4
발표2	영어권의 일본군‘위안부’ 연구와 초국적 기억 김은경(한성대 교수)	19
발표3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베를린 소녀상 소고 정용숙(춘천교육대 교수)	39

‘램지어 사태’ 이후
한국의 ‘위안부’ 연구 및 논의 변화

2021.12.10.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1. 보편적 여성인권 침해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유하기

- 본 발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간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초국적 '위안부' 논의의 흐름을, '램지어 사태'를 매개로 점검하고, 생산적 논의의 방향으로 그 흐름새를 만들려 가려는 데 목적이 있다.

- '초국적 공론장의 '위안부' 이슈'라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범위에서 올 한해 한국의 '위안부' 연구 경향을 정리하고 올해보다 한 단계 나아간 새로운 해의 논의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

- 국제사회의 '위안부' 논의는 문제제기 초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07년 미 하원 결의안 통과 이후 미국 등을 중심 표적으로 한 '위안부' 피해 부정론자들의 행보는, 기림해야 할 역사로서 글로벌 사회에 자리잡은 '위안부' 문제 인식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 '보편적인 여성인권 침해' 문제로서의 '위안부' 문제의 성격은, 1932-1945년간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일어났던 국가권력에 의한 성동원·성폭력의 문제가 시공간을 가로질러 양태를 달리하며 지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 이 때문에 자국의 성폭력, 인신매매 문제나 타국의 여성인권 침해 문제에 개입하기 위하여 '위안부' 문제가 적극적으로 언급되고 그 근본적 해결이 요청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의 '보편성'은, 일본정부에게 추궁을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여성인권 침해의 가해주체들-국가권력, 사회권력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불필요한 정쟁은 질색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지만) 물론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서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에 대한 성동원, 성폭력을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든 일본군과 일본정부는 명백하게 가해책임이 있다.

부국강병의 도달을 근대국가의 목표로 삼고 식민지 지배를 통해 제국을 확장해간 근대일본은 코오쇼세(公娼制)를 국가발전의 '필요악'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국내외 폐창세력(합법적 성매매만 반대하는)과 국제기구의 비판을 받았고, 메이지 정부 이래 패전에 이르기까지 그 회피 논리와 편법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글에서 굳이 공창제가 아니라 코오쇼세라고 표기하는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 일본이 정치적 지배력을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코오쇼세라고 불린 제도의 실체가 -흔히들 공창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듯이- '합법 성매매 허가/불법 성매매 금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권력(경찰이나 헌병)이 성병검진을 통제하는 합법/비합법 성매매의 관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비합법 성매매 관리 시스템은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체제(=법의 예외상태) 하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황군'을 '위안'하여 전쟁승리를 돕는다는 의미의 기만적인 국가용어, '위안부'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나는 '보편적인 여성인권 문제'로서 '위안부'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일본군'위안부'피해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권력이나 주류 사회세력은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성을 동원하거나 착취하면서, 어떠한 명분을 갖다 붙이고 어떠한 합법/비합법 시스템을 만들어왔는가. 전 세계적으로 인권 개념이 대두된 뒤에도 지속되어 온 이러한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가해주체들은 어떠한 책임을 져왔는가.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가해 연루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직면하고 성찰하며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사실 지난 30년간 '위안부'문제는 '보편적인 여성인권 문제'로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기반한 국제연대도 상당히 확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전개됐던 '램지어 사태'는 글로벌 사회의 이러한 문제인식과 연대활동의 강도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 그런데 이러한 '보편성' 논의가 그 역사적 '특수성'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회적으로 일본의 가해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만큼 부정론자들은 정치적으로 더욱 결속되었다. 논쟁은 없고 정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2. 글로벌 지식시장의 역학관계, 주류권력을 향한 인정투쟁

존 마크 램지어, 일본 법경제학의 세계적 권위자 되기

•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기 위한 램지어의 게임이론은, 일본어로 집필하여 일본 산토리 학예상을 받은 저서, 『법과 경제학: 일본법의 경제분석』(1990, 弘文堂)으로부터 시작

➔ 아오키 마사히코(青木昌彦,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선포(選平): **미국 학문적 전통의 좋은 면을 계승하고 있으며 일본 사회의 정당한 국제적 이해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크다.**

➔ **하마다 코이치**(浜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 경제학자로서 게임이론 전문가, 아베정권의 내각관방참여로서 아베노믹스 설계자로 유명)

: 선진국에 비해 일본인의 재판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일본 특유의 문화나 비용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램지어는 이를 안정적인 법규범의 기능으로 설명한다고 평가. 게임이론, 특히 반복게임과 평판의 경제학 이론에서 봤을 때 기업과 상대는 반복적 거래 행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 강제적인 법 규범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

: 그의 책이 일본 법경제학에 줄 수 있는 충격은 잠재적으로 매우 크다

: 그러나 램지어는 주로 간접적인 증거에 의지하고 있고 복잡한 일본인의 소송행동을 단순하게 설명했다고 비판. 극히 시카고 경제학파의 색채를 가지고 시장만능의 ‘법과 경제학’을 설명하고 있는데 경제학을 충실하게 이해했거나 후생경제학의 시각에서 정부의 역할에 주의했다면 그렇게 단순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 램지어와 같은 극단적인 의견을 정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젊은 법학자 층이 나오고 있는 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글을 맺음.

- 램지어는 분배나 공정과는 거리를 두고 금전적인 사회적 경제 가치는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경제학적으로 법에 접근

- 일본인 법 행동의 (서구 기준의) 합리성 입증

- 일본의 경제성장을 세계 보편적인 합리성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일본의 법학자, 경제학자의 추천 속에서 램지어가 '일본법의 대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 2014년 한국 심포지움에 방문한 램지어를 언론훈은 "회사법, 일본법, 법경제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로 소개(매일경제, 2014.6.15.)

• 램지어는 자신의 기본 논리를 1991년 일본 공창제 하에서 포주와 예창기가 맺는 성매매 계약에 적용(「예창기 계약: 성산업의 '신뢰할 수 있는 커미트먼트」, 영어논문은 1993년 일본어로 번역)

- 번역자 소노 히로오(曾野裕夫)는 램지어가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계약의 자율적 강제구조를 해명. 이는 법적 환경 정비를 위한 뛰어나고도 현재적인 문제라고 지적. 아울러 포주와 창기의 계약협력을 강제했던 법이 일본의 매춘방지법(1956년)으로 무너지면서, 현재에는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폭력이나 마약 등을 배경으로 한 자율적 강제에 의해 성매매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함.

* 램지어는 1991년 논문을 조잡하게 요약, 정리하여 이번 「태평양전쟁의 성 계약」을 작성.

- 평시 일본의 장기 계약 → 식민지 조선의 작부, 여급 계약 → 전시 [조선인] '위안부' 계약, 으로 설명.

- 2020.12. 『국제 법경제학 연구』 온라인 탑재 → 2021.1.28. 『산케이신문』 온라인 보도(부정론자 그룹의 일원인 후쿠이 요시타카 설명), 기사 제목은 「세계에 퍼지는 '위안부=성노예설' 부정,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학술논문 발표」

- 하버드대와 세계적인 일본 법경제학자라는 램지어의 권위로, '위안부' 피해부정론이 학술연구 분야에 진입. 주류 지식시장에 편입함으로써 정쟁이 아닌 '학술적 논쟁'의 외피를 쓰게 됨.

램지어를 비판하는 글로벌 학자들에 환호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태도는, 갈등 중심적이고 피상적이며 내셔널리즘에 입각해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임양준, 2020/ 이완수, 배재영, 박경우, 2016)

-이번 램지어 관련 보도 속에서도 언론들은 ‘친일 교수 대 글로벌 학자’, ‘자발적인 매춘부 대 강제된 성노예’, ‘업주와 계약=피해자 아님 대 계약서 없음=피해자’ 등의 대립 구도 안에서 기사를 생산해 냄.

-램지어 논문의 오류를 밝혀낸 학자들에게는 “글로벌 연합군”(SBS 뉴스, 2021.2.22.)이라는 표현이 붙었고, 일본 학계의 세미나를 보도하면서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에 집중하여 <위안부 연구 1인자 요시미 교수 “램지어 논문 인정하기 어렵다>(MBN 뉴스, 2021.3.14.), <‘위안부’연구 1인자 “램지어, 계약서 한 통 제시 못해”>(JTBC 뉴스, 2021.3.14.) 등의 제목을 뽑기도.

-한국의 단체가 개최한 토론회나 기자회견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언론인이나 한국사 일타 강사는 SNS를 통해 ‘한국 역사학계는 뭐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하기도.

➔ 문제는 30년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이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국 대중들의 인식과 정보 구성에 언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언론의 견지에서 옹호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보도하며, 그 과정에서 유력인사가 소환되거나 새로운 ‘전문가’가 창출됨.

* 예를 들어, 한국계 미국인 석지영 교수의 <더 뉴요커> 투고문 보도 반응

“(단독)램지어 “위안부 매춘 계약서 없어”……결국 실토” (SBS 뉴스, 2021.2.26.), “(단독)뉴요커에 “위안부, 진실을 찾아서”……램지어 “증거 없다, 일부는 실수” 시인” (KBS 뉴스, 2021.2.26.), “(단독) 궁지 몰린 램지어 “내가 실수했다…… 비판에 괴롭다”” (MBC 뉴스, 2021.2.26.)

- 뭔가 ‘승리의 기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학문적 자유에는 증거에 제대로 바탕을 두어야 할 책임이 따른다”를 것을 강조한 석 교수의 투고문에는, “한국에서는 책임을 축소하려는 일본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고, 이 따금씩 이러한 분노가 ‘일본군이 한국 처녀들을 성노예로 납치해갔다’는 식이 아닌 주장 앞에서는 편협함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면서 “증거를 기반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는 위안부 관련 주장을 펼친 박유하 교수의 수난”이 언급되어 있음. 또한 “위안부라는 폭력적 제도에서 한국 가부장제의 책임을 살피는 사라소 교수의 다층적 연구”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한국 언론에 인용되지 않음.

➔ 램지어를 비판하는 글로벌 학자들의 인식에도 ‘위안부’문제인식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조선인] ‘위안부’ 피해인정이 ‘세계적으로’ 공유되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보도.

3. 한국의 '위안부' 문제 인식의 표준: 한국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

- 한국의 의무교육 과정에서 '위안부' 역사는 초등5년 사회, 중학교 역사①(세계사), 역사②(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음.

초등 사회: “일본군‘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로 인한 여성을 가리킨다.”

중학교 역사 ①: 7종 중 6종의 교과서가 ‘제2차 대전 시기 대량학살을 통한 세계의 인권침해 문제’로서 홀로코스트, 난징대학살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서술.

“[일본군‘위안부’]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1937년부터 교전 지역에 이른바 일본군‘위안부’를 운영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의 여성을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유린하였다.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의 나이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였다. 이들 중에는 농촌 지역이나 가난한 집의 여성들이 식당 종업원이나 간호사 등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끌려간 일도 있었고, 유괴나 인신매매 등으로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 일본군은 ‘위안부’의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 패전 후 퇴각하면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모아 학살하거나 집단자살을 강요하였다.”(천재교육)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아시아 각지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하였다. 그 대상은 주로 중국과 조선, 타이완, 동남아시아 등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지역의 여성들이었다.”

➔ 강제동원과 세계적인(=보편적인) 인권침해 강조

➔ ‘위안부’문제가 홀로코스트 문제와 비견할만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사실이라는 의미이지, 역사적 성격이 같다는 의미가 아님.

: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위안부’기록물을 등재 신청할 때 등재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를 홀로코스트 및 캄보디아 학살에 비교하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음.(김지민, 2021:222).

: 홀로코스트와 ‘위안부’ 문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일본을 나치에 비유하여 국제적으로 비난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경쟁적인 피해자 의식’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김지민, 2021:209)

4. 2021 한국의 연구경향: 탈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 젠더 관점의 접근

초국적 공론장의 '위안부' 담론 분석

-2000년여성국제법정: 전쟁의 아시아를 여성과 식민주의 시각에서 불러내다(양현아.김수아 편)

-전쟁과 여성 인권: 세계의 일본군 '위안부'문제 인식, 심산(민유기. 엄운옥. 정용숙 외 지음)

→ 이 두 권의 책은 '램지어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기획되어 집필되어 올해 발간됨. 초국적 공론장에서 홀로코스트와 견줄만한 역사적 사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매끄럽게 인식하는 태도에 제동을 건다. 법정 개최 20주년을 맞아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의의와 과제를 점검한 전자의 책은, 당대 국제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천황' 유죄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법정의 과정을 살피고 전후 '위안부' 범죄의 불처벌 문제를 지적한다. 한편 전쟁범죄 차원뿐만 아니라 '위안부' 범죄의 식민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면서, 한국 측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피해의 보편성'이 앞세워진 나머지 법정에서 식민주의 문제가 배제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주로 조선인 피해자의 식민성, 동원과정과 배치의 역사적 특수성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나는 피해의 '보편성'을 공유하는 전제로서 식민주의 문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30여년 사이 세계 언론의 '위안부' 담론을 살펴본 후자의 책은 보편적인 인권침해 사례로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세계 언론의 시각이 결국 저마다의 정치적 이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지적한다. 주로 한일간의 갈등으로 이해되는 '위안부' 양상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때 또 다른 이해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언론의 '위안부' 담론은 역사 사료에 대한 접근과 언어의 문제로 동아시아 외부에서, 미국과 유럽의 일부 동아시아 학자를 제외하고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이 책이 분석한 각국의 언론의 보도경향들은 여전히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국제관계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위안부'문제를 끌어와 결국은 각자의 이해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초국적 공론장의 성격에 대해 경각심을 준다.

- 일본군 '위안부'기억 장소로서 초국적 지식장: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를 중심으로(김은경)

램지어 비판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 이해

- 램지어 교수 논문을 매개로 일본정부의 책임 다시 보기(강정숙); '램지어 사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김창록)

→ 램지어 논문의 오류 사례 지적. 역사연구와 국제법 연구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와 일본정부의 책임문제가 '이미' 공유된 과정과 그 내용 검토.

- 교차하는 권력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 램지어와 역사수정주의 비판(박정애)

→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거나, 운동단체의 내셔널리즘을 비판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적 해결'을 옹호하는 내셔널리스트 비판. 젠더 및 탈식민 관점의 '위안부' 역사 이해 강조

- 미국 시민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과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논란(김지민)

→ 아시안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국내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배경과 내용 설명. 역사의 중층성과 복합성, 다양하게 얽힌 맥락을 이해하길 바라는 학계와 거리를 두는 듯 하면서도, "학계와 운동계는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 필자는 최근 한국에서 『그녀의 일생: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는 '위안부' 문제의 현재를 다루다』 라는 제목의 저서 발간.

- "무엇을 더 숨길 게 있나"- '위안부' 망언의 본질주의를 넘어서(김주희)

→ 여성주의 관점에서 램지어의 프레임과 논리를 비판. 램지어는 오랫동안 여성학, 역사학, 정치경제학 분야의 학자들에게 비판받아온 경제적 합리성 이론이 전제한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내세워 피해부정. 또한 망언을 활용하여 피해자 자격론을 강화하면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피해자의 다양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 피해자 자격론을 넘어 피해자의 "세계"-이동의 지식을 공유 지식이자 연대의 방법론으로 삼는 "현장의 여성주의 정치학" 제안

- 한일 위안부 외교의 역사와 쟁점(이헌미)

→ 식민주의와 포스트식민의 법 구조를 구조적 부정의의 맥락에서 검토, 또한 민주 국가의 정치적 책임성의 프레임 안에서, 글로벌 젠더 정의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가능성을 모색.

5. 교차하는 권력들, 젠더와 탈식민 관점의 '위안부' 역사

캐롤 글릭은 '세계가 위안부에게 빚진 것'이라는 글에서 '위안부'의 이야기는 동아시아 기억 정치의 초점이자 국제인권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기준이 되는 존재로서 초국적 기억 경관의 '세계적 피해자들'로 자리매김되었다고 단언.

세계사적으로 '위안부' 피해 역사는 부정과 '인정'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부정론자들이 사실 인정 다툼의 프레임 안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지속되는 국가폭력과 여성의 의사에 반한 범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실증'은 끝난 것인가.

피해부정에 대응하는 실증은 물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15년간-더욱 본질적으로는 80여년간-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가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여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착취하고, 성노예화한 '위안부' 피해의 실상은 더욱 드러나야 한다. 현재까지 지속되는 성폭력 문제들에 섬세하기 연결되기 위해서 더욱 역사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세계사적 '위안부' 인식은 제2차 대전 시기의 점령지 '위안부'에 수렴되어 있다. 일본이나 그 [실질적] 식민지 지역, 또는 중일전쟁 이전의 '위안부' 피해양상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해진 바가 없다. 일본군 점령지의 피해여성들도 점령지 이전의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존재조건을 갖춘 이들이다.

- '위안부' 범죄의 식민주의 성격을 따지려는 시도들은 조선인 피해자에 국한된 한국 내셔널리즘의 발로로 이해/비판되기도 하지만, 식민주의는 식민지라는 지역, 그리고 식민지적 환경에서 존재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되고, 이송되고, 배치되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예를 들어 재조 일본인 여성은 제일 여성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동원, 이송되었다. 또 타이완을 거쳐 전쟁터로 이송된 여성 중 상당수가 일본인/조선인 여성이었다. 친일정권이 들어선 중국지역의 피해자는 식민지 지역의 여성과 동원방식이 흡사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는 현재의 문제의식에 따라 시공간을 넘나 들면서 새롭게 쓰일 수밖에 없다.

이때 교차하는 권력들-국가주의에 의해 배치된 공권력, 민족, 계급, 가족, 젠더 위계-에 의해 ‘위안부’ 이야기 속에서 전해지는 것과 삭제되는 것, 침묵되는 것, 그리고 왜곡되는 것에 대한 세심한 맥락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위안부’에 대한 초국적 기억 속에서 교차하는 권력들에 따른 다름의 정치는 더욱 치열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초국적으로 연루된 지점들이 입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리라 생각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목적에 따라 피해자들을 이용하거나 배치했던 권력들의 권력행사 방식을 낱낱이 드러낼 때, 그럴듯한 명분을 띤 권력의 목적이 인권에 반하는 죽음의 정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공유했을 때, 우리들의 연루지점을 사유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기억의 의미를 갱신하며 ‘위안부’ 역사를 지속적으로 써 나가는 가운데 ‘본인의 의사에 반한 피해’를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사회를 근절하겠다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강정숙, 2021, 램지어 교수 논문을 매개로 일본정부의 책임 다시 보기, 페미니즘연구21(1).

김은경, 2021, 일본군 '위안부' 기억 장소로서 초국적 지식장: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연구42.

김주희, 2021, "무엇을 더 숨길 게 있나"- '위안부' 망언의 본질주의를 넘어서, 여성과역사34.

김지민, 2021, 미국 시민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과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논란, 역사비평135.

김창록, 2021, '램지어 사태'-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역사비평135.

박정애, 2021, 교차하는 권력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 램지어와 역사수정주의 비판, 여성과역사34.

이완수, 배재영, 박경우, 2016, 아베 내각의 일본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각, 한국언론정보학보, 79.

이현미, 2021, 한일 위안부 외교의 역사와 쟁점, 역사연구42.

임양준, 2020, 한국·일본·미국의 위안부 갈등 보도에 나타난국가별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 KBS, 일본 NHK, 미국 NBC 텔레비전저녁뉴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32(2).

<저서>

김지민, 2021, 그녀의 일생: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는 '위안부' 문제의 현재를 다루다, 소울하우스.

민유기.염운옥.정용숙 외 지음, 2021, 전쟁과 여성 인권: 세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심산

양현아.김수아 편, 2021, 2000년 여성국제법정 전쟁과 아시아를 여성과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불러내다, 경인문화사.

영어권의 일본군‘위안부’ 연구와 초국적 기억

김은경(한성대 교수)

영어권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와 초국적 기억¹⁾

김은경(한성대)

I. 머리말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이하 따옴표 생략)는 글로벌 기억으로 공유되고 있다. 캐롤 글럭(Carol Gluck)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여성을 ‘글로벌 희생자’로 보았다. 위안부가 ‘상징권력’을 가진 ‘글로벌 희생자’로 보편화된 순간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나 아시아인의 손을 떠났다고도 했다.²⁾ 미국에서 위안부 연구를 이끈 마가렛 스테츠(Margaret D. Stetz)는 위안부 문학이나 홀로코스트 문학처럼 미국 대학에서 ‘위안부연구(“Comfort Women” Studies)’가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으며 그 가능성을 전망했다. 아울러 대학에서 초국적 텍스트로서 위안부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제기했다.³⁾

글럭과 스테츠의 주장은 위안부 피해의 역사가 국제사회의 인정체계 안으로 편입돼 글로벌 기억 장소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지난 30년 간 피해자와 활동가가 힘겹게 벌인 인정투쟁의 결과로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위안부 역사가 ‘글로벌’이라는

1) 이 발표문은 「일본군‘위안부’ 기억 장소로서 초국적 지식장: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를 중심으로」(『역사연구』 42호, 2021)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인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2) Carol Gluck,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in *Mnemonic Solidarity: Global Interventions*, eds., Jie-Hyun Lim, Eve Rosenhaft (London: Palgrave Mcmillan, 2021), p.94.

3) Margaret D. Stetz, “Representing ‘Comfort Women’: Activism through Law and Art”, in *Transformations: Feminist Pathways to Global Change*, eds., Torry D. Dickinson, Robert K. Schaeffer (New York: Routledge, 2008), p.248; Margaret D. Stetz, “Teaching ‘Comfort Women’ Issues in Women’s Studies Courses”, *Radical Teacher*, no. 66, 2003.

상상적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그 기억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런 기억정치가 발휘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는 그 자체로 탐구대상이다. 강현이(Laura Hyun Yi Kang)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위치에서 위안부를 둘러싼 초국적 (페미니즘) 연대의 이상을 날카롭게 심문했다. 여성 억압이나 젠더화된 피해의 “아시아화(Asianization)”가 학계와 초국가적 기구, NGO를 통해 공식화돼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은 글로벌 기억 장소에 등장한 위안부 역사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준다.⁴⁾ 이는 위안부 여성의 피해가 ‘보편 세계’인 글로벌 층위로 수렴될 때 소거되는 로컬리티와 재생되는 타자화의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위안부 이슈가 글로벌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잔혹함의 척도인 홀로코스트에 견줘 경쟁적으로 위안부를 희생자화하려는 동아시아 각국의 태도다.⁵⁾ 2021년 3월 『아시아-태평양 저널: 재팬 포커스』는 “공적 역사로서 일본군위안부”를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는데 서문에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다. 저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앞 다투어 홀로코스트를 민족 서사와 연관시키려는 희생자 경쟁은 병리학적 징후라고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가 홀로코스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쟁 속에서 위안부 역사가 단순화되고 ‘다크 투어리즘’으로 상품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계가 공적 역사로서 위안부의 복합적 특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초국적 지평에서 이를 맥락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위안부를 공적 역사로 맥락화한다는 것은 가해자 공동체 대 피해자 공동체라는 이분법적 기억을 넘어 다방향적 기억(multidirectional memory)을 중시하는 것이다.⁶⁾

위안부를 둘러싼 초국적 지식장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일은 새로운 논의 지평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⁷⁾ 이는 글로벌 지식장에 개입하는 것이 지식의 서구 종속성과 한국 학계의 주변성을 탈피하는 대안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다. 초국적(transnational)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로컬’의 위계를 해체하고, 위안부가 한국과 일본의 내셔널리즘 의제로 제한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4) Laura Hyun Yi Kang, *Traffic in Asian Women*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20), pp.41-50.

5) 임지현은 여러 차례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고통을 경쟁하며 희생자의식을 강화하는 지구적 차원의 기억 헤게모니 싸움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임지현,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후마니타스, 2021, 23-50쪽; Jie-Hyun Lim, “The Second World War in global memory space”,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Volume III, Total War: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ds., Michael Geyer, Adam Tooz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6) Mark R. Frost, Edward Vicke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as Public History: Scholarship, Advocacy and the Commemorative Impulse”,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3, 2021.

7)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다음을 참조. 정용욱 외, 『언론의 역사분쟁 보도와 동아시아 평화: 최근 미국과 일본 언론의 ‘위안부’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Chanhaeng Lee, “Can the Comfort Women Speak?: Mainstream US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Korea Journal*, vol. 61, no. 1, 2021; Woonok Yeom, “Going Selective? British Media’s Coverage of the Comfort Women”, *Korea Journal*, vol. 61, no. 1, 2021.

본 연구에서는 영어권에서 발표된 일본군위안부 연구동향과 쟁점을 검토한다. 여러 분과학문에서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지식장의 동향을 검토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초국적이고 학제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접근방법에 따라 앞으로 위안부 연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서 이 글에서는 위안부 연구동향을 큰 틀에서 조망하되, 위안부제도의 성격과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성과를 소개한다.

II. 영어권 연구의 현황

1991년 위안부 생존자였던 고 김학순의 증언 이후 운동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먼저, 시기별 연구 현황을 살펴보겠다. 1992년 무렵부터 연구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기고문을 각종 학술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엔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조사해 수차례 보고서를 발표한 뒤 국제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커졌다. 이즈음 발간된 한국, 필리핀, 네덜란드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집도 관련 연구를 추동했다.

위안부 연구는 1993년 앨리스 채(Alice Y. Chai)가 “아시아-태평양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위안부 역사와 연대운동을 다룬 논문⁸⁾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1995년에 조지 히스(George Hicks)가 단행본을 출간해 주목을 받았다.⁹⁾ 1997년 최정무 등이 참여한 『포지션즈』의 일본군위안부 특집은 비판적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제공했다.¹⁰⁾ 이런 초기 연구를 토대로 영어권 학계의 연구물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영문으로 발표된 위안부 연구 통계는 <표 1>과 같다.¹¹⁾

8) Alice Yun Chai, “Asian-Pacific Feminist Coalition Politics: The Chǒngshindae/Jūgunianfu (‘Comfort Women’) Movement”, *Korean Studies*, vol. 17, 1993, pp.67-91.

9)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NSW: Allen & Unwin Pty Ltd, 1995);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W. W. Norton, 1995)(조지 히스 지음, 전경자·성은애 옮김, 『위안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창작과비평사, 1995).

10) Chungmoo Choi, “Guest Edito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Colonialism, War, and Sex”, *Positions: East Asian Cultural Critique*, vol. 5 no. 1, 1997.

11) 이 연구의 대상은 영어권에서 발행한 위안부 연구지만, 통계자료에는 비영어권에서 발행한 영문 발간물까지 조사해서 넣었다. 기고문, 서평, 언론 기사 등은 통계에 넣지 않았으나, 동아시아 정치와 사회·배상 관련 연구에서 위안부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포함했다. 검색엔진은 Google Scholar, Scopus, Amazon, Proquest를 이용했으며, 검색 키워드는 ‘Comfort women’, ‘Japanese sexual slavery’ 등으로 했다. 주제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검색엔진에 따라 통계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초 자료조사는 백시진(팔레스타인평화연대) 선생님이 도와주었다. 백 선생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표 2〉 일본군‘위안부’ 영문 연구논저 통계표(1991~2020년)

	학술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단행본 게재 논문	총계
1991~1995년	6	1	3	0	10
1996~2000년	34	2	7	3	46
2001~2005년	44	3	4	5	56
2006~2010년	45	9	5	12	71
2011~2015년	58	8	14	20	100
2016~2020년	111	3	34	26	174
총계	298	26	67	66	457

※ 총 457건 중 중복 4건(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단행본에 다시 게재한 경우 중복 계산)

1993년부터 영문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위안부 연구는 1995년까지 10건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10년대 이후 급증했다. 최근 5~6년 사이에 국제적으로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30년 동안 나온 연구물의 형태별 통계를 보면, 학술논문 298건, 학위논문 26건, 단행본 67건, 단행본 게재 논문 66건으로 총457건(4건 중복)이다. 학술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2차대전기 과거사나 여성 폭력을 주제로 한 단행본에서도 위안부 이슈를 다룬 섹션이 꾸준히 증가했다.

주제별 연구 현황은 대체로 위안부 제도의 성격, 사죄와 배상, 운동, 재현과 집단기억, 일본 신민족주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안부 제도의 성격 연구는 초기에는 영어권에 그 실상을 알리고 각국의 피해 사례를 소개한 것이 많았다. 점차 논의가 축적되면서 전시 성폭력의 맥락을 중시한 연구, 전전과 전후 성 착취 시스템에 주목한 연구, 성노예론을 비판한 연구,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연구 등이 생산되었다. 역사수정주의 연구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의 영문 번역서나 일본 우익이 전략적으로 기획출판한 도서 외에 전문 학술연구는 램지어의 논문이 유일하다. 그밖에 위안부 제도의 폭력성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 방법론은 문헌분석, 구술과 재현 중심의 문화 분석, 국제정치적 비교, 국제법 해석과 판결 사례 분석 등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일부 (한국이나 중국의) 민족주의적 시각이 두드러진 연구도 있으나 대체로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는 초국적 관점을 중시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초국적 페미니즘은 각종 경계를 횡단하며 가장 왕성하게 연구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위안부 제도를 단일한 요

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젠더, 계급, 인종, 식민성 등이 결합된 문제로 보고 교차성을 중시한다. 또 위안부 제도의 성격 그 자체를 규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의 망각과 기억의 정치학을 날카롭게 심문한다. 초국적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진영논리에 따라 판단하려는 태도와 선을 긋고 위안부 제도라는 거대한 폭력구조가 탄생한 복합적 배경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비가시화 또는 과잉 가시화되는 맥락을 비판하고 있다.

Ⅲ.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 연구

피해 실태 연구로는 조지 히스, 데이비드 슈미츠(David Andrew Schmidt), 우스티나 돌고폴(Ustinia Dolgopol), 보니 오(Bonnie B. C. Oh), 민병갑, 안젤라 손(Angella Son) 등이 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직접 피해 생존자를 조사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한 조사관들의 연구다. 돌고폴은 일본정부와 군이 위안부제도의 설립과 위안부의 모집·이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임을 전제로 일본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compensation)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개별 가해자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현실적으로 범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연합국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자 치유를 위한 건강센터와 기념관 건립에 힘쓸 것을 권고한 점이다. 연합국이 전후 위안부 피해사실을 알고도 책임자를 기소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에 책임을 묻은 것이다.¹²⁾

히스는 전시 위안소는 언제나 있었지만 일본군위안부제도는 아시아 전역에서 어린 소녀에서 나이든 성매매 여성까지 광범위하게 강제력을 행사해 동원한 폭력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제도의 인종주의적 문제를 비판했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을 선호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성병 보유자가 적고 피부색이 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³⁾ 일본어 교수인 데이비드 슈미츠는 “20세기 잔혹행위 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 하나”로 위안부 문제를 규정하며 일곱 개의 장에 걸쳐 위안부제도의 실상에 대해 서술했다.¹⁴⁾

민병갑과 안젤라 손은 피해 생존자의 구술을 통해 위안부 제도의 실상을 비판했다. 민병갑은 기존 구술 자료 외에 1995년부터 2001

12) Ustinia Dolgopol, “Women’s voices, women’s pain”, *Human Rights Quarterly*, vol. 17, no. 1, 1995.

13)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14) David Andrew Schmidt, *Ianfu -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of the Pacific War: Broken Silence*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2000).

년까지 19명을 인터뷰해 식민주의, 젠더, 계급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식민성이나 젠더문제만을 강조하는 시각을 비판하고 교차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¹⁵⁾ 안젤라 손은 기존 구술 텍스트 분석을 통해 위안부 제도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손은 이탤릭체를 사용해 “*위안부 소녀-여성(comfort girls-wom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녀성’을 강조했다.¹⁶⁾

학술성고가 많지 않았던 시기의 연구들은 주로 초기 일본에서 나온 자료나 일부 연구서 등 제한된 자료를 활용했다. 히스와 슈미츠의 저서는 이런 면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저서뿐 아니라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중군위안부(從軍慰安婦)』(1973),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1976) 등을 여러 곳에서 참고했다. 그나마도 일본어 연구 논저와 사료 인용이 대부분이다. 조지 히스는 특히 김일면의 저서에 의존했다. 주지하듯, 김일면은 위안부 연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산재한 자료들을 찾아 저술하면서 참전군인 회고록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했는데, 히스 역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그런 히스의 저서를 참고해 재생산한 연구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히스가 정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에세이처럼 서술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첫째, 히스는 제1장 “마르스와 비너스(Mars and Venus)”에서 신화를 소환하여 군인과 성 착취 관계를 낭만화하고 이것을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로 본질화했다. 군인 출신이라면 “정상적인 사회적·감정적 배출구를 박탈당한 채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듯이 섹스에 집착한 사실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라며 남성의 이성애적 성욕을 전제하는 서술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 둘째, 2장 제목으로 사용한 “인육시장(The flesh market)”처럼 피해를 자극적으로 재현하는 용어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했다. 김일면의 글을 참고해 “일본 여자들은 직업매춘부들이었으므로 성적 흥분을 위장하는 일에 능란했으며, 이는 고객으로부터 급속한 반응을 불러일으켜 - 매춘부의 진짜 목적인 - 성적 관계에 신속한 종결을 지었다 ... 반면에 한국 여자들은 연속적인 접대로 육신이 지치기 전까지는 일본인 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꾸밈없는 반응을 보였다”며 피해를 전시하며 관음증적 시선을 내비쳤다.¹⁷⁾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간된 판본은 1938년 중국 닝궈(宁国) 위안소(Ningkuo comfort station)에서 촬영된 속옷만 입은 위안부 여성의 전신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했다.¹⁸⁾ 이는 아시아 여성의 몸을 에로틱하게 전시하려는 출판사의 판매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저자의 관점이 이와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

15) Pyong Gap Min, “Korean ‘Comfort Women’: The Intersection of Colonial Power, Gender, and Class”, *Gender&Society*, vol. 17 no. 6, 2003.
 16) Angella Son, “Inadequate Innocence of Korean *Comfort Girls-Women*: Obliterated Dignity and Shamed Self”, *Pastoral Psychology*, vol. 67, no. 2, 2018, pp.175-176; The Research Team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Center, ed., *Stories that Make History: The Experience and Memori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Girls-Women*, trans., Angella Son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20).
 17)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p.66; 인용은 한글 번역서를 참고. 조지 히스 지음, 전경자·성은애 옮김, 『위안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77-78쪽.

다. 셋째, 아시아 여성이나 한국과 일본을 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의 상황을 거론하며 “아시아 여성들은 이제까지 천년왕국을 기다리며 그들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고 서술했다.¹⁹⁾ 또 “서구의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어떤 나라도 재일 한국인 집단의 경우와 같이 종족간의 차별을 법률로 정해서 실시하는 경우는 없다”며 일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드러냈다.²⁰⁾

문헌분석과 구술 텍스트 분석을 통한 위안부 실태 연구들은 모두 여성을 강제로 동원해 성노예로 만든 위안부제도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예외적으로 안젤라 손은 성노예론에 기초하되 소녀를 강조하는 “위안부 소녀-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개 ‘소녀’를 별도로 표기한 연구들은 당시 국제법상 미성년 여성의 인신매매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런 시각에서 마가렛 스테츠는 위안부 동상의 소녀 이미지가 어린 소녀의 희생과 조직적인 여아 인신매매에 기초해 위안부제도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서구사회에 전한다고 했다.²¹⁾ 이와 달리, 손의 글에서 ‘소녀’는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결백(innocence)’, ‘치욕(shame)’, ‘존엄(dignity)’ 등 어휘에 조용한다. “한국인 위안부 소녀-여성들의 경험은 군대 성폭력이 얼마나 여성의 존엄을 말살하고 치욕적이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서술은 소녀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²²⁾ 성폭력 피해를 치욕으로 보는 것은 매우 가부장제적인 이해 방식이다. 이는 위안부 연구와 운동 프레임이 ‘명예와 존엄’에서 ‘여성인권’으로 바뀐 의미를 간과한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에 역행하는 것이다.²³⁾

18)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https://www.amazon.com/Comfort-Women-Slaves-Japanese-Imperial/dp/0285632590/ref=sr_1_6?dchild=1&keywords=George+Hicks&qid=1632068985&s=books&sr=1-6). 검색일: 2021년 9월 1일).

19)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p.274; 인용은 한글 번역서를 참고. 조지 히스 저, 전경자·성은애 역, 『위안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324쪽.

20) Ibid., p.275; 인용은 위의 책 참고. 325쪽.

21) Margaret D. Stetz, “Making Girl Victims Visible: A Survey of Representations That Have Circulated in the West”, in *The Transnational Redress Movement for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eds., Pyong Gap Min, Thomas R. Chung and Sejung Sage Yim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20).

22) Angella Son, “Inadequate Innocence of Korean *Comfort Girls-Women*: Obliterated Dignity and Shamed Self”, p.175.

23) Carol Gluck, “Operations of Memory: “Comfort Women” and the World”, p.75; Margaret D. Stetz, “Wartim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 Feminist Response”,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pp.94-95.

IV. 전쟁의 맥락을 중시한 연구

1990년대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는 전시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국제법상 범죄인 전시 성폭력 개념에 유의하여 전쟁과 군사화의 맥락을 중시하는 위안부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유키 타나카(Yuki Tanaka)의 저서는 영어권에서는 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서다. 타나카는 가부장주의, 인종주의, 식민주의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그 역사적 과정을 추적했다. 방대한 문서를 기초로 제도의 설립·운영에 일본 육해군과 외교부처의 협력 관계가 있었음을 밝히는 한편, 식민지배와 성 착취의 관련성에 주목했다.²⁴⁾ 전쟁말기 연합군이 공모해 위안부의 존재를 은폐했던 것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미군과 오스트레일리아 군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주둔지역에서 군 위안소를 직접 통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전후 일본정부와 미 점령 당국의 협력관계가 일본의 성매매 제도 확장에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전전 일본의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과 공창제가 위안부제도의 기원이라고 보면서도, 그것을 일본 예외주의로 보지 않고 전쟁과 군사화의 문제로 보았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각국의 자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나 위안소를 목격한 연합군의 기록을 분석했다. 또 일본군위안부제도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연합군의 사설 위안소 이용을 거론하며 연합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²⁵⁾ 이런 고찰을 통해 “역사적 기록은 전쟁이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성폭력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쟁을 폐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성폭력을 줄이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²⁶⁾ 하지만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모든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시각과는 거리를 두었다. 미군이나 중국 공산당의 사례와 비교하여 위안부제도의 폭력적 특징을 강조하며 일반화를 경계했다.²⁷⁾

위안부제도를 전시 강간 또는 전시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캐롤라인 노마(Caroline Norma)는 군사적 환원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군사적 환원주의는 전시 성폭력이 전장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라는 시각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노마는 전시 성폭력 패러다임이 평시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녀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24) Yuki Tanaka, *Japan's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and prostitution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 occup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2).

25) Tessa Morris-Suzuki, “You Don’t Want to Know About the Girls? The ‘Comfort women,’ the Japanese Military and Allied Forces in the Asia-Pacific War”,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3, iss. 31, no. 1, 2015.

26) Ibid., p.15.

27) Ibid., p.16.

이유는 전시 상황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수많은 일본인 위안부와 성매매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²⁸⁾

노마는 정대협이 위안부 기념관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으로 이름 지은 것을 거론하며 이는 위안부 문제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광범위하게 재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마에 따르면, 전시 군 점령지 성매매를 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 영어권 문헌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전시 여성의 성매매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저서조차 “강제된” 형태와 “자유로운” 형태를 구별하고 “강제 매춘”만을 “전쟁 수단”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노마는 전시 성매매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그보다 더 파급력이 큰 평시 성매매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다.²⁹⁾ 세이야 모리타(Seiya Morita) 역시 캐롤라인 노마가 번역한 최근 글에서 전시 성폭력 패러다임은 폭력이 왜 성적인 형태로 나타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평시 성폭력 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⁰⁾

노마의 주장은 언제부터인가 ‘일본군위안부 = 전시 성폭력/전시 강간’을 당연시해온 관행을 재고하게 한다. 그러나 전시 성폭력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모두 전쟁을 유일한 폭력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아니다. 니콜라 헨리(Nicola Henry)는 전시 강간에 주목하면서도 교차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시 강간 교차모델은 젠더·인종·민족·나이·사회경제적 상태로 인해 표적이 된 전시 성폭력 희생자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전시 성폭력은 전전과 전후의 일상적 형태의 폭력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³¹⁾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 강간 패러다임으로 환원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박정애는 보다 역사성을 강조했다. 일본군이 점령지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실제로 목인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박정애는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군이 공창제 시스템을 동원해 군의 ‘위안처’로 활용했기 때문에 전시 재편된 공창제는 결국 위안소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위안부제도의 성격과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³²⁾ 전쟁을 중요 요인으로 보면서도 공창제라는 성 착취 제도의 변동을 고려한 이 연구는 전시 성폭력 패러다임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8) Caroline Norma, *The Japanese Comfort Women and Sexual Slavery During the China and Pacific Wars* (Lond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2016)(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북스, 2020, 350-355쪽).

29) Caroline Norma, “The First #METOO Activists: Contemporary Campaigning in Support of the Former Military ‘Comfort Women’”, *Cross Currents*, vol. 69, no. 4, 2019. pp.441-447.

30) Seiya Morita, Caroline Norma, “Sexual Violence in Wartime and Peacetime: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20st Century”,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9, 2021.

31) Nicola Henry, “Theorizing Wartime Rape: Deconstructing Gender, Sexuality, and Violence”, *Gender & Society*, vol. 30, no.1, 2016, pp.51-52.

32) Jung-ae Park, “The Concept and the Categ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rough Looking at Their Damage Condition”,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 17, no. 2, 2021, pp.86-91.

V. 성 착취 제도에 주목한 연구

위안부제도의 배경으로 공창제나 인신매매 등 성 착취 구조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초기 연구로 앨리스 채, 카즈코 와타나베(Kazuko Watanabe),³³⁾ 존 리(John Lie)³⁴⁾ 등이 있다. 앨리스 채는 위안부제도의 설립에서 일본군의 결정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가락유키상, 위안부, 자판유키상(ジャパゆきさん)은 군국주의, 가부장제, 국가관리 성 산업이라는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했다. 각기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노동조건(working conditions)이 비슷했다는 것이다.³⁵⁾

캐롤라인 노마는 전전-전시-전후의 연속적인 성 착취 시스템 속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성격을 분석했다. 근절주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마는 그동안 위안부 생존자 정의운동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성 착취 문제를 직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일본군위안부제도가 민간 성 착취 산업의 여러 면을 판박이처럼 모방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민간 성산업과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위안부제도가 전시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수 사례라는 시각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로서 자격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가르는 연구 시각과 운동 관행을 맹렬히 비판했다.³⁶⁾ 세이야 모리타 역시 위안부 제도가 평시와 분리된 전쟁 범죄가 아니라 평시와 연결된 제도화된 여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 노동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일본인 위안부를 개인의 의지로 선택한 성 노동자로 보는 것은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³⁷⁾

강현이는 90년대 이후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위안부를 통해 ‘아시아 여성’이 구성되어온 방식을 분석했다. ‘아시아 여성’을 방법론으로 제시하며 위안부를 어떤 고정된 과거사건 속에 배치하고 정체화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재사유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사회에서 여성인신매매와 성노예, 여성폭력에 대한 논쟁의 변화, 보상과 기념 문제까지 폭넓게 아우른 그녀의 저서는 위안부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저자는 여성 이주, 노동, 섹슈얼리티에 대한 국내외적 감시체제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위안부제도는 여성인신매매의 강력한 사례라고 했다. 저자는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이 동일하게 노예의 범주에서 인식될 수 있었던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일본군위안부가 성노예제로서 전쟁범죄이자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국제적 인정체계 내로 수용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다.³⁸⁾

33) Kazuko Watanabe, “Trafficking in Women’s Bodies, Then and Now: The Issue of Military ‘Comfort Women’”, *Peace & Change*, vol. 20, no. 4, 1995.

34) John Lie, “The State as Pimp: Prostitution and the Patriarchal State in Japan in the 1940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38, no. 2, 1997.

35) Alice Y. Chai, “Asian-Pacific Feminist Coalition Politics: The Chōngshindae/Jūgunianfu (‘Comfort Women’) Movement”.

36) 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37-51쪽.

37) Seiya Morita, Caroline Norma, “Sexual Violence in Wartime and Peacetime: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20st Century”.

위안부제도를 성매매 시스템과 연계하는 시각은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피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위안부나 공창제 모두 여성을 성노예로 만드는 국가 관리 성 착취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노마처럼 일본인 위안부에 초점을 둔 주장 역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안부 역사를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³⁹⁾

흥미로운 사실은 위안부제도와 공창제를 직접 연결하지 않더라도, 많은 연구논저에서 위안부(comfort women)와 함께 군 매춘/군 매춘부(military prostitution/prostitutes), 강제매춘(forced prostitution) 등을 한 논문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앨리스 채는 위안부제도를 “일본군 성노예제(Japanese military sex slavery)”로 규정하면서도, 초기 동원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조선인 여성을 “군 성노동자(military sex workers)”로 모집했다고 했다.⁴⁰⁾ 이와 유사한 표기는 다른 글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용어의 혼용은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은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와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1926년 노예협약에 준해 성노예의 개념을 설명한 뒤 “성노예는 또한 모든 형태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강제매춘(forced prostitution)을 포함한다”고 서술했다.⁴¹⁾ 카르멘 아르키바이는 강제노동, 강제매춘, 성노예 등의 개념 차이를 언급하면서도 이것들은 모두 국제법 위반으로 맥락상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다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피해 생존자들이 ‘매춘부’라는 오명을 쓴 것이 그들의 고통을 더 심화시켰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려 깊은 설명을 덧붙였다. 강제매춘은 본질적으로 성노예와 다르지 않지만 같은 수준의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강제매춘은 여성을 강간하는 남성의 관점을 반영하지만 성노예는 피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다.⁴²⁾ 이것은 ‘성노예나 매춘부냐’와 같은 협소한 이해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38) Laura Hyun Yi Kang, *Traffic in Asian Women*, pp.51-151.

39) 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다음 글을 참고. Mark R. Frost, Edward Vicke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as Public History: Scholarship, Advocacy and the Commemorative Impulse”.

40) Alice Y. Chai, “Asian-Pacific Feminist Coalition Politics: The Chōngshindae/Jūgunianfu (‘Comfort Women’) Movement”, p.67, p.69.

41) Gay J. McDougall,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E/CN.4/Sub.2/1998/13)(New York: United Nations, 1998), pp.12-13.

42) Carmen M. Argibay, “Sexual Slavery and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2003, pp.386-387.

VI. 성노예론 비판 연구

1996년에 제출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 쿠마라스와미는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의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위안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를 “군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s)”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⁴³⁾ 학계의 논의는 대체로 유엔 보고서의 권위를 승인하며 그에 기초해 이루어져 왔다.

성노예론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다. 그 가운데 엘리사 리(Elisa Lee)와 소정희의 연구가 주목된다. 엘리사 리가 인권담론의 서구 중심성과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을 비판하며 그에 기초한 성노예론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소정희는 여성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성노예론을 비판했다.

엘리사 리는 유색 여성 페미니즘 비평, 유색 퀴어 비평,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의 방법론과 시각에서 보편적인 인권 프레임에 의한 성노예론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초점은 성노예론 비판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위안부 담론에 대한 퀴어 비평적 독해에 있다. 엘리사 리는 위안부 이슈가 ‘민족적 수치’에서 ‘여성인권의 국제적인 상징’으로 변화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탐색하고 인권담론에 기초한 성노예론이 결국 이성애 규범성과 서구 제국주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공창제 폐지론에 나타나는 페미니즘 인도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폐창론이 이성애 규범성에 기초해 성적 순결성을 강조하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엔이나 미국의 인권 레토릭과 성노예론 역시 동일한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보았다.⁴⁴⁾ 국제사회에서 여성 참정권보다 인신 매매가 최초의 여성인권 의제가 되었던 배경에 인종주의, 제국주의, (혈통의 순수성에 기초한) 국가주의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보면⁴⁵⁾ 엘리사 리의 문제제기가 타당한 면이 있다. 엘리사 리의 비판이 제한된 사례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현대정치철학에서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른 인권담론을 위안부 이슈와 연계하여 보다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⁴⁶⁾

43) Radhika Coomaraswamy,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E/CN.4/1996/53/Add.1)(New York: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6), pp.4-5.

44) Elisa Lee, “Behind the Mask of Human Rights: ‘Comfort Women,’ Heteronormativity, & Empires”, *Tapestries: Interwoven voices of local and global identities*, vol. 4, no. 1, 2015.

45) Stephanie A. Limoncelli, *The Politics of Trafficking The First International Movement to Combat the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3.

46) 미국언론에 나타난 인권담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찬행의 연구를 참고. Chanhaeng Lee, “Can the Comfort Women Speak?: Mainstream US Media

소정희는 영어권에서 위안부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학자다. 관련 연구에서 그녀의 저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⁴⁷⁾ 한국에서 일부 논문이 번역되기도 했으나⁴⁸⁾ 여러 논쟁거리를 담고 있는 이슈가 충분히 소개되지는 않았다. 2008년에 출간한 저서는 비판인류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강제로 납치돼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어린 소녀’라는 전형적인 위안부 서사를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판에 박힌 이야기’를 거부하며 동원과정에서 아버지로 대표되는 조선의 가부장제와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강조했다. 또 일부 위안소는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먹거리와 돈이 풍족한 사례도 있다며 여성들이 모두 노예적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오늘날 관행적인 표현인 ‘매춘부’ 대신 ‘성노예’로 부르는 것은 ‘위안부는 일본군을 따른 매춘부였을 뿐’이라는 일본 신민족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강제동원론과 성노예론은 일부 위안부 여성들이 상업적 성산업에 있었던 현실을 무시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무력한 희생자로 만들고 인간 행위성(human agency)을 부정한다고 비판했다.⁴⁹⁾

성노예론 비판은 위안부 서사의 전형성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소정희는 그동안 위안부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강제동원과 성노예 프레임에 맞춰 생존자 구술을 전형적인 이야기로 만든 결과, 그것에서 벗어난 경험을 가진 서발턴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형적인 이야기’와 다른 구술을 적극 소개하고 일부 생존자의 구술 변화에 주목했다. 생존자 이용수가 처음에는 친구와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받고 기뻐했다고 했으나 후에는 일제 헌병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⁵⁰⁾ 또 위안부 구술에 나타난 전후 트라우마와 일본군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추가하여 개별 여성이 체험한 사적 경험을 통해 거대서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⁵¹⁾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의 논리와 매우 흡사한 소정희의 저서는 한국의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문화를 설명하는 글에서 많이 인용된다. 일본 우익에게는 생존자 구술의 신뢰성을 의문시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저자 자신이 일본정부의 책임을 부정하

Representa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pp.30-32.

47) Chunghee Sarah Soh,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48) 소정희, 「교육받고 자립된 자아실현을 열망했건만: 조선인 ‘위안부’와 정신대에 관한 ‘개인 중심’의 비판인류학적 고찰」,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49) Chunghee Sarah Soh, “Prostitute versus Sex Slaves: The Politics of Representing the ‘Comfort Women’”,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p.81; Chunghee Sarah Soh,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pp.33-34.

50) Chunghee Sarah Soh,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pp.99-101.

51) Ibid., pp.181-189.

는 것은 아니라거나, 자신의 학문적 주장을 악용하지 말라며 일본우익에게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문승숙은 소정희의 모호한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소정희가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폭력과 ‘공적 섹스’ 제도에 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일본군의 책임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⁵²⁾ 캐롤라인 노마의 비판은 더욱 신랄하다. 노마는 소정희가 전복하려는 ‘판에 박힌 이야기’는 일본군이 여성의 성을 착취했다는 사실인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소정희가 일본군이 “위안부를 같은 인간으로 여기며 섹스를 통해 개인적 존엄을 지켰던 것 같다”고 서술한 부분을 거론하며 위안소의 성 착취에 인도주의적 이유를 갖다 붙였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⁵³⁾

이처럼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먼저, 행위성에 대한 해석이다. 구술 연구의 미덕은 구술 주체의 자기 해석과 의미화에 주목하여 서발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경험적인 구술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비가시적인 폭력구조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우에노 지즈코는 여성 행위성의 양면성에 주목하며 그 어려움을 “구조와 주체의 애로”로 표현했다. 이에 “구조로도 주체로도 환원되지 않는 에이전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구조의 폭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그러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⁵⁴⁾ 이것이 가능하려면 비가시화된 폭력구조와 주체 행위가 충돌하는 접점을 치열하게 사유해야 한다. 여성들의 열망이 비가시적인 거대한 폭력구조와 맞닿아 있었던 현실의 아이러니에 대한 통찰 없이 여성의 행위성만을 떼어내는 것은 탈맥락적이고 탈역사적인 해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정희가 언급한 식민지 조선의 가부장제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제도의 폭력구조에 식민주의와 계급문제뿐 아니라 가부장제가 연루되어 있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의 폭력성에 대비되는 한국의 폭력성으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된 성노예’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적 특질로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식민지기 호주를 중심으로 재편된 조선의 가부장제는 천황제 파시즘체제와 분리할 수 없는 식민지적 근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 민법을 적용해 결혼한 여성의 법적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성인자녀 및 미성년 자녀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지 못했다. 친권자와 호주가 이들의 노동계약을 맺는 주체였기 때문에 가부장이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여성을 파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히 전쟁시기에는 군국주의 파시즘체제의 전개에 따라 여성의 몸이 재배치돼 그 수요가 급증하자 가부장이 딸을 파는 행위가 한층 확대되었다. 식민지기 내내 호주와 친권자는 천황제 국가의 하위수행자이자 자본 축

52) Seungsook Moon, “(Book Review)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Worlds of Desire: The Chicago Series on Sexuality, Gender, and Culture”, *Pacific Affairs*, vol. 84, no. 1, 2011, p.172.

53) 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98-106쪽.

54) 우에노 지즈코,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의 관점」,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어문학사, 2020, 42쪽.

적의 협력자 역할을 맡았는데, 총동원체제가 그 ‘진가’가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가부장제는 천황제의 작동 시스템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가부장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것이 내적 성찰의 계기가 되는 데 반해, 영미 학계에서는 (‘문명화’되지 못한) 아시아적 전통이나 특성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아버지가 딸을 학대하거나 파는 것은 가부장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조선 전통’ 그 자체나 조선의 문화적 특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교나 아시아 문화로 보는 시각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해 다양한 젠더차별이 나타난다고 보는 본질주의적인 접근이며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다. 문화 차이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관념은 정치사회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무력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구술 텍스트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윤리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소정희는 무책임하게 생존자의 구술이 변화했다는 사실만 언급하여 생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일본 우익에게 무차별적인 공격과 모욕을 당하게 방치했다. 동일한 경험에 대한 구술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구술사 연구자에게는 상식에 가깝다. 이는 단지 기억력의 쇠퇴만은 아니다. 기억은 정치사회적 영향 속에서 늘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로서 이를 규명하고 싶었다면 비판의 방향을 피해 생존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서사’를 요구하는 사회로 돌렸어야 했다. 서발탄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청자는 천개의 감각기관을 열어야 한다. 공감 없는 듣기는 타인의 고통을 스펙터클로 소비하는 문제를 반복 재생할 뿐이다.

VI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학자들이 학제적 교류를 통해 생산한 위안부 지식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초국적 지식장에서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론에 기초하되 여성인권, 전시성폭력, 강제매춘, 강제노동 등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위안부 지식과 기억을 생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는 초국적 기억이자 공적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위안부 역사가 고정되지 않고 세계 각지의 젠더·인종·계급 문제와 결합해 재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복수(複數)의 기억으로 다시 구조되고 있는 위안부 역사는 각지의 로컬 역사와 만나고 미래 기억과 얽혀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이런 상호소통 과정은 다방향적(multidirectional)일뿐만 아니라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기억 환경을 만들고 기억의 탈중심화를 촉진한다. 이것이 한국학계에 제기하는 과제는 결코 적지 않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자 가운데 동아시아학-일본학 전공자의 비중이 높아 한국계 외에 한국 자료와 연구 성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영어와 일본어 자료를 참고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이는 지식생산의 편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또는 동아시아의 지식이 일본을 경유해 영어권에 소개되고 그것이 인용을 통해 재생산되는 현실은 지식생산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위안부제도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한국적 특성쯤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안긴다. 하지만 이를 민족주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국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들의 자기성찰과 관련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수 역사수정주의 출판물을 제외하면, 위안부 제도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지형에서 ‘강제 vs. 자발’, ‘성노예 vs. 매춘부’의 구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논쟁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초국적 지식장에서 성노예론은 이미 합의된 지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노동이나 강제매춘을 성노예와 대립적으로 보지 않는 연구도 많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에 기초해 위안부 피해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많은 연구에서는 전후 여성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이유로 한국의 가부장제를 지목했다. 일부는 이를 문화적 차이로 환원하는 서술 태도를 보였다. 물론 위안부제도의 구조적 폭력성과 가부장제를 분리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것이 한국에서 제기될 때는 내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데 반해, 영어권에서는 아시아적 특성이나 한국의 유교 전통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런 본질주의적 접근은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를 재생산한다.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이 한국 생존자들을 보고 증언을 결심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지 한국의 가부장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 피해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언어와 인식 틀이 없었기 때문이다. 90년대 이전까지 피해자는 그저 ‘불운한 낙오자’나 성애화된 재현물로 소비되었을 뿐이다. 여성들의 침묵은 전후 냉전 체제, 미군 기지촌과 군사화, 가부장제적 성문화와 성 착취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영어권 학계에서는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사례에 견줘 여성에 대한 폭력(VAW)과 전시 성폭력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 2차 대전 시기 연합군의 성폭력, 전후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성 착취 등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한다. 이것은 무엇이 여성에 대한 폭력인지, 무엇이 여성을 예측화하고 노예화하는지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각도에서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패러다임을 의문시하고 재논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위안부 경험을 초국적 역사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것을 여성인권이라는 이상적인 렌즈로 보는 것 역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초국적 이상이 강조되는 가운데 로컬리티를 삭제하고 소수자를 주변화하는 것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다. 서구 ‘제1세계’ 중심의 인권 패러다임이 위안부 역사를 보편화하여 초국적 기억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아시아’ ‘여성’의 타자화로 기능하는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구적 보편성, 이성애적 정상규범, 국민국가시스템에 기초해 형성된 인권 담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작업은 향후 초국적 지식장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 Radhika Coomaraswamy,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E/CN.4/1996/53/Add.1)(New York: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6).
- Gay J. McDougall,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E/CN.4/Sub.2/1998/13)(New York: United Nations, 1998).

〈연구서〉

- 정용욱 외, 『언론의 역사분쟁 보도와 동아시아 평화: 최근 미국과 일본 언론의 '위안부'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 Caroline Norma, *The Japanese Comfort Women and Sexual Slavery During the China and Pacific Wars* (Lond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2016)(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 2020).
- Chunghhee Sarah Soh,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David Andrew Schmidt, *Ianfu -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of the Pacific War: Broken Silence*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2000).
-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NSW: Allen & Unwin Pty Ltd, 1995);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W. W. Norton, 1995)(조지 히스 지음, 전경자·성은애 옮김, 『위안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창작과비평사, 1995).
- Laura Hyun Yi Kang, *Traffic in Asian Women*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20).
- Thomas J. Ward, William D. Lay, *Park Statue Politics: World War II, Comfort Women Memorials in the United States* (Bristol: E-International Relations Publishing, 2019).
- Yuki Tanaka, *Japan's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and prostitution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 occup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2).

<연구논문>

김청강, 「‘위안부’는 어떻게 잊혀졌나? 1990년대 이전 대중영화 속 ‘위안부’ 재현」,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1집, 2017.

Alice Yun Chai, “Asian-Pacific Feminist Coalition Politics: The Chōngshindae/Jūgunianfu(‘Comfort Women’) Movement”, *Korean Studies*, vol. 17, 1993.

Angella Son, “Inadequate Innocence of Korean Comfort Girls-Women: Obliterated Dignity and Shamed Self”, *Pastoral Psychology*, vol. 67, no. 2, 2018.

Bonnie B. C. Oh, “The Japanese Imperial System and the Korean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Carmen M. Argibay, “Sexual Slavery and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2003.

Carol Gluck, “Operations of Memory: ‘Comfort Women’ and the World”, in *Ruptured Histories: War, Memory, and the Post-Cold War in Asia*, eds., Sheila Miyoshi Jager, Rana Mitter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in *Mnemonic Solidarity: Global Interventions*, eds., Jie-Hyun Lim, Eve Rosenhaft (London: Palgrave Mcmillan, 2021).

Caroline Norma, “The First #METOO Activists: Contemporary Campaigning in Support of the Former Military ‘Comfort Women’”, *Cross Currents*, vol. 69, no. 4, 2019.

Chanhaeng Lee, “Can the Comfort Women Speak?: Mainstream US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Korea Journal*, vol. 61, no. 1, spring 2021.

Chunghhee Sarah Soh, “Prostitute versus Sex Slaves: The Politics of Representing the “Comfort Women””,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 “Japan’s National/Asian Women's Fund for Comfort Women”, *Pacific Affairs*, vol. 76, no. 2, 2003.

Chungmoo Choi, “Guest Edito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Colonialism, War, and Sex”, *Positions: East Asian Cultural Critique*, vol. 5 no. 1, 1997.

Elisa Lee, “Behind the Mask of Human Rights: “Comfort Women,” Heteronormativity, & Empires”, *Tapestries: Interwoven voices of local and global identities*, vol. 4, no. 1, 2015.

- John Lie, "The State as Pimp: Prostitution and the Patriarchal State in Japan in the 1940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38, no. 2, 1997.
- Jung-ae Park, "The Concept and the Categ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rough Looking at Their Damage Condition",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 17, no. 2, 2021.
- Laura Hein, "Savage Irony: The Imaginative Power of th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1990s", *Gender and History*, vol. 11, no. 2, 1999.
- Margaret D. Stetz, "Wartim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 Feminist Response",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 , "Teaching 'Comfort Women' Issues in Women's Studies Courses", *Radical Teacher*, no. 66, Spring 2003.
- , "Representing 'Comfort Women': Activism through Law and Art", in *Transformations: Feminist Pathways to Global Change*, eds., Torry D. Dickinson, Robert K. Schaeffer (New York: Routledge, 2008).
- , "Making Girl Victims Visible: A Survey of Representations That Have Circulated in the West", in *The Transnational Redress Movement for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eds., Pyong Gap Min, Thomas R. Chung and Sejung Sage Yim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20).
- Mark R. Frost, Edward Vicke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as Public History: Scholarship, Advocacy and the Commemorative Impulse",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3, 2021.
- Nicola Henry, "Theorizing Wartime Rape: Deconstructing Gender, Sexuality, and Violence", *Gender & Society*, vol. 30, no.1, 2016.
- Pyong Gap Min, "Korean 'Comfort Women': The Intersection of Colonial Power, Gender, and Class", *Gender&Society*, vol. 17 no. 6, 2003.
- Seiya Morita, Caroline Norma, "Sexual Violence in Wartime and Peacetime: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20st Century",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9, 2021.
- Tessa Morris-Suzuki, "You Don't Want to Know About the Girls? The 'Comfort women,' the Japanese Military and Allied Forces in the Asia-Pacific War",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3, iss. 31, no. 1, 2015.
- Ustinia Dolgopol, "Women's voices, women's pain", *Human Rights Quarterly*, vol. 17, no. 1, 1995.
- Woonok Yeom, "Going Selective? British Media's Coverage of the Comfort Women", *Korea Journal*, vol. 61, no. 1, 2021.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베를린 소녀상에 관한 소고

정 용 숙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베를린의 소녀상

위안부 기억의 지구화 (Carol Gluck, 컬럼비아 대학교)

'위안부'는 트랜스내셔널 기억경관의 "지구적 피해자"(global victim)

1990년대 이래 위안부의 기억화(coming to memory)는 전후 시대 "지구적 기억문화"(global memory culture)를 변화시켰다.

동아시아 기억전쟁의 지구화

평화의 소녀상 해외 설치 운동: 미국(2013), 캐나다(2015), 호주(2016), 중국(2016), 독일(2017)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간 기억정치와 역사전쟁의 무대가 된 독일: 프라이부르크(2016), 비젠트(2017), 함부르크/본(2018), 도르트문트(2019), 베를린(2020)

독일 정치권의 냉담한 실용주의: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2007) 동참 거부(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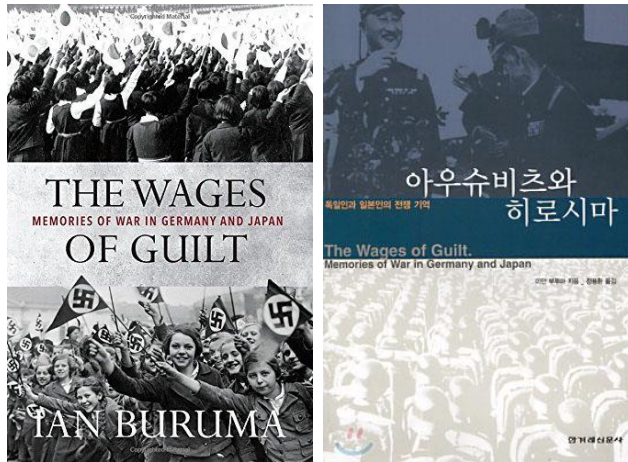
자신의 전시 성폭력 과거를 공론장에서 제대로 다뤄본 경험이 없는 독일에 '소녀상'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는?

Berlin, sei mutig! Die Friedensstatue muss bleiben!

**Demonstration am 13.10. um 12 Uhr
an der Friedensstatue
(Ecke Birkenstraße / Bremer Straße)**



과거청산 모범국?



독일과 일본의 전쟁 기억 (Ian Buruma)

가해자와 피해자. "전도된 희생자 의식"(reversed victimhood)

죄의식 (guilt) vs 수치심 (shame)

독일의 과거정리(Aufarbeitung; coming to terms)

'잊힌' 희생자 개념은 1980년대 공론화 (아래로부터의 역사' 운동).

집시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차별 지속.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 배상(2000-2006)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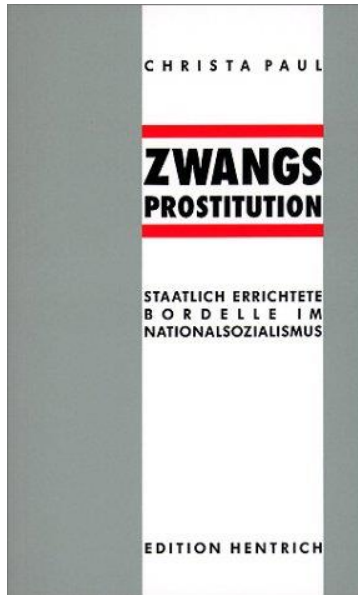
아프리카 식민지 제노사이드에 대한 소극적 태도

- 나미비아 식민지의 헤레로 나마 대량 학살 (1904-1908)
- 식민지 역사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중반에 시작 (식민지 역사의 짧음)
- 책임 인정과 배상 요구에 독일 정부는 반응하지 않음
- 헤레로 봉기 100주년을 맞아 최초의 사과 (2004), 제노사이드 인정 공식 문서 발표 (2016)
- 2021년 5월 28일 사과 및 배상 계획 발표: 공식성명 아닌 언론을 통해. 법적 책임을 조심스러운 문구로 피해 감. 11억 유로는 개발원조 이지 배상이 아님 (선례로 남기를 원치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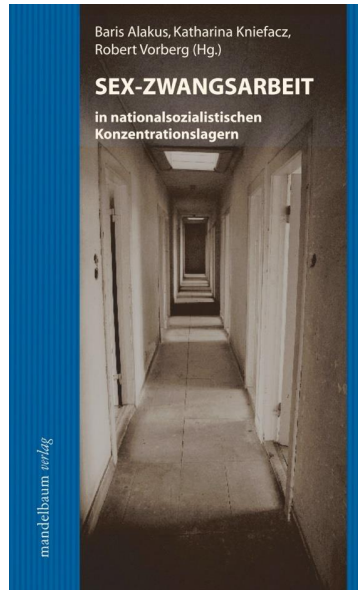
나치 국가와 군대의 전시 성폭력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 '매춘'을 이유로 수용소로 끌려간 여성들
- 점령지 매춘소에 동원된 현지 여성들 (프랑스 및 동부전선)
- 수인 노동력 제고를 위해 친위대가 만든 수용소 매춘소에 동원된 여성 수인들
- 동부전선의 독일군 성폭력 피해자들
- 연합군 전시강간의 피해자들 (독일, 폴란드, 체코 여성들)

반세기의 침묵



크리스타 파울, 『강제매춘. 나치 국가의 매춘소』 (1994)



빈 대학교 현대사 연구팀 전시회 <나치 수용소의 성적 강제노동> (마우트하우젠, 2005)

“수용소 동쪽 끝에 있는 여덟 개의 블록은 의무실과 진료소였다. 24번 블록은 전염성 피부병 환자들만 수용하는 크레체블록이었다. (...) 37번 블록에는 보급계 장교의 사무실과 작업사무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창문이 늘 닫혀 있는 29번 블록이 있었는데, 그곳은 프라우엔블록(여자블록), 즉 폴란드 출신 해프틀링(수감자) 여자들이 일하고 라이히스도이체(독일인)만 드나들 수 있는 사창가였다.”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돌베개, 43쪽)

“그들의 피부에 난 부스럼딱지들은 어떤 종류의 질병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녀들이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증명하였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그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거침없이 받아들였다.” (Eugen Kogon, *Der SS-Staat*, 1946, pp. 214)

수용소 매춘소는 전쟁 중에도 전후에도 “수치 중의 수치”로 은폐되었다.

종전 직전에 이미 철거되기 시작해 지금은 단 두 곳만 남아있다.

성적 강제노동에 동원된 여성 수인들은 '사회부적응자'(Asoziale)로 나치 폭력의 주변부 피해자에 속했다(집시, 동성애자, 유전병자 등)

수용소를 추모지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매춘소는 의도적으로 묻혔다.

국가 포주 나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국가와 군대의 전시 성노예 특징:

인종주의 위생정책과 성매매 규제(regulation; Réglementation)의 결합

- 나치는 성매매(혐의)를 단속하고 해당 여성들을 '사회부적응자'로 수용소에 격리
- 성매매 단속은 "건강한" 결혼과 가족의 보호라는 인종주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과 한 세트
- 독일 영토와 점령지 모두에서 독일인 남성과 현지 여성의 사회적 성적 접촉 엄금
- 점령지 독일군 사령부는 민간 성매매를 금지하고, 민간 업소를 폐쇄하고 그 시설을 징발하여 독일군 전용 매춘소로 사용. 군의관의 업무.
- 나치 국가의 3대 포주: 내무장관 프리크 / 육군 원수 브라우히치 / 친위대장 힘러

나치의 성 정책

- 성매매의 중앙집중화와 표준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함
- 그 이유는 위생과 청결에 대한 인종주의적 강박
-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적 고려 "건강한 아리아인 병사를 귀환시켜 재생산에 기여"

수용소 매춘소

- 남성 수인 노동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성의 제공
- 인종주의 분리 원칙 엄격 고수함으로써 유대인 없는 나치 범죄가 됨.
- 노동력 착취를 위한 효율적 관료적 성착취 기구
- '노동을 통한 절멸'(Tod durch Arbeit)을 목표로 하는 '죽음의 기계'(힐베르크)를 떠받치는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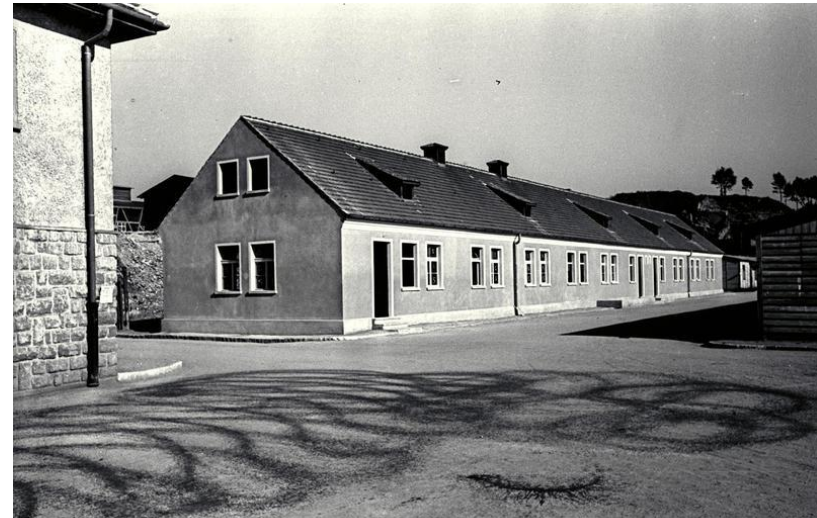


수용소 노동력 제고를 위한 성매매 제공은 친위대장 하인리히 힘러의 마우트하우젠 수용소 시찰에서 태어난 아이디어. 힘러가 친위대 경제행정 담당자 오스발트 폴(Oswald Pohl)에게 보낸 편지(1942년 3월 23일자) "부지런히 일하는 수감자들에게 유곽 여자를 최대한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도급제도 확실히 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있다면 노동생산성이 크게 오를 것이다."

아우슈비츠와 구젠 수용소의 매춘소 막사 건물



Block 24a des Stammlagers Auschwitz.
Im ersten Stock befand sich das Lagerbordell.



Bundesarchiv Bild 192-170
Foto: o. Ang. | 1940/1943

[구젠 수용소에 남아있는 매춘소 막사](#)
[Bundesarchiv Bild 192-170, KZ Mauthausen, SS-
Baracke Lager Gusen.jpg](#)

이중의 희생자

수용소 성노예는 '희생자의 희생자'이며 '이중의 희생자'.

피해자의 존재가 드러날 수 없었던 이유. 부헨발트 수용소의 공산주의자 정치범은 동독 국가건설 신화의 주역. 매춘소의 존재가 이 '집단서사'를 더럽혀서는 안 되었다.

나치 성노예 재발견의 배경

- 1990년대 기억연구의 활성화
-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의 자극으로 1980년대 여성사 연구 성장
- 2007년 라벤스브뤼크 여름대학 <20-21세기 전시 성적 강제노동>: 지구적 기억 공간에서 동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동유럽 전시강간, 나치 성노예 피해 경험과 기억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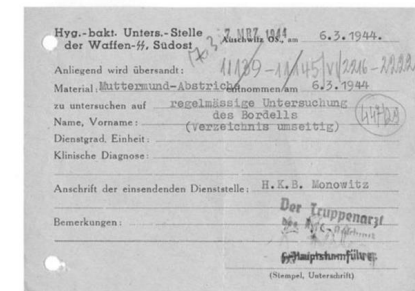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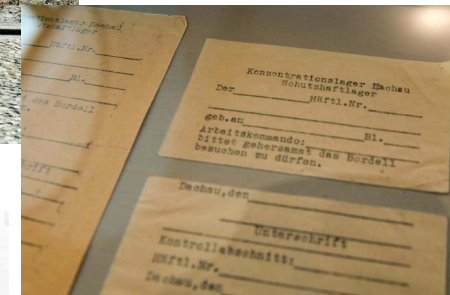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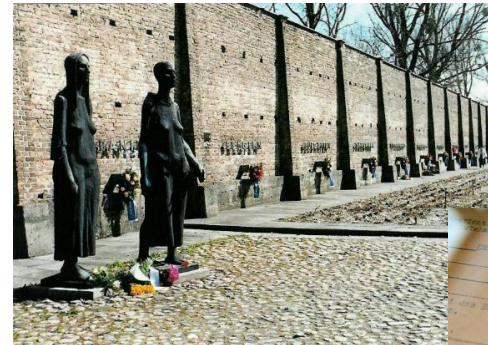
나치 성노예는 아카데미와 공공역사에서 다루질 뿐 피해 인정과 배상은 커녕 사회적 논의 자체가 없다!

피해 경험과 기억이 '집단화'(collectivization)되지 못했기 때문 (월호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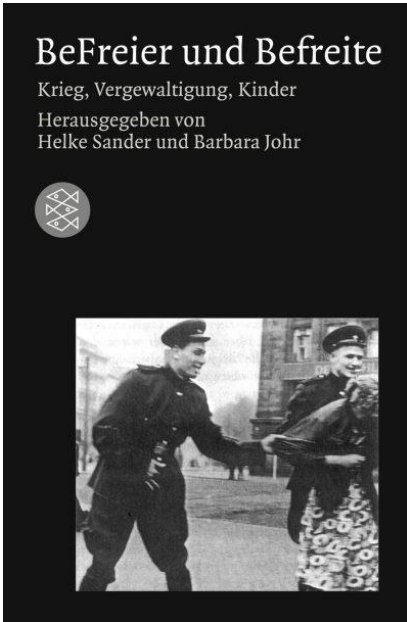
- 독일 여성운동의 한계: 체제에 동조한 가해자로서 독일 여성에 주목
- 독일군과 소련군의 희생자였던 동유럽의 냉전과 탈냉전 시기 특수한 상황
- 동유럽 여성운동의 한계: 역사보다 삶과 노동 등 현실 문제에 관심.

소련군 전시강간과 일본군 위안부는 이 '집단화'에 성공한 사례!

피해 경험의 말하기와 기억의 정형화를 통해 공론장에 안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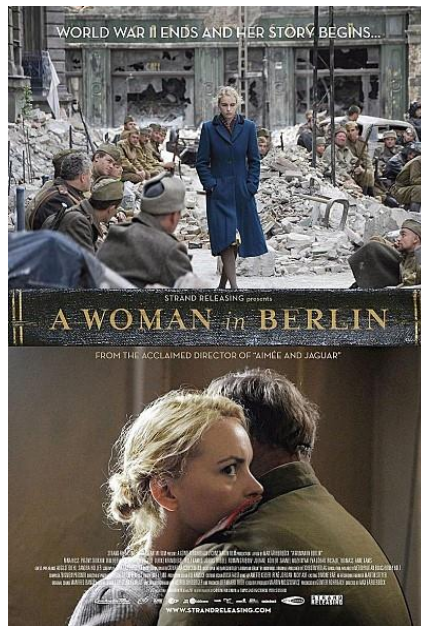


잘못된 피해자



헬케 잔더 / 바바라 요어, 『해방자와 해방된 자』(1992)
독일어 제목의 의도적 오기가 이 주제의 정치적 까다로움을 드러낸다.

『베를린의 한 여인』(1959/2003)
피해자 “일기”/가해자의 희생자 전도 비판/진본성 의심
“대단히 문학적인 경험 보고”이며 전시 성폭력을 증언하는 메타 서사



연합군 강간 집단기억의 틀은 냉전과 인종주의, 소련군대의 잔인성과 야만성에 집중. 나치 성폭력 상대화.
일본군 위안부 집단기억의 가부장제와 탈식민 민족주의

본격 학술연구서 겐하르트, 『군인들이 왔을 때』(2015). 독일인의 피해 부각으로 나치 범죄의 상대화, 가해자의 피해자 전도를 통해 독일 전쟁 범죄 부인의 빌미 제공 우려를 논의.



디아스포라 액티비즘

Comfort Women as Traveling Trope (Carol Gluk)

- 기억의 "지정학": 국가 차원의 전쟁 서사 변화시키는 힘으로 국제사회 여론과 압력이 중요
- "홀로코스트가 이제 독일만의 기억이 아니듯이, 위안부 역시 트랜스내셔널 기억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Diaspora Activism" (Daniel Schumacher)

-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들이 주류사회의 인정을 차지하려고 다투면서 '위안부' 논의는 지역 정치와 문화 갈등의 프리즘을 통과하며 굴절되었다"
- "폭동의 트라우마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기억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주변화 경험으로 위안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성노예 역사에 내재한 문화 권력으로 결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집단 의식을 무리짓고 발전시키는 상징적 원천이 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감정적 연결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민족적 소속감 (재)구축에 위안부 기리기를 선택하고 이를 미국 사회 안에서 정치 참여와 정당성 선언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할 수 있다."(윤지환, 테네시대학교 박사논문, 2017)

독일에서 위안부 운동의 주체는 한인 이주 여성들

- 1960-70년대 노동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재독 한인 사회. 광주민주화항쟁 계기로 한반도 정치와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
- 베를린 재독한국여성모임은 1991년 김학순 공개증언을 계기로 위안부운동 시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협력.
- 독일 내 베를린 일본여성회, 독일 녹색당, 메디카 몬디알레(구 유고전쟁 강간캠프 피해자를 지원하는 독일 의사들의 NGO)와 협력.
-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번역 출간 등 활동.

프라이부르크의 소녀상(2016)

- 수원 시의 자매결연 선물. 일본 정부의 반발. 현지 지역언론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며 소녀상 건립을 비판.
- 비젠트 소녀상과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소녀상 건립의 의미는?
- 베를린 소녀상은 위안부 기억이 미국 내 소수 민족 수난의 기억과 결합했던 글렌데일/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한 사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기억의 지구적 연대를 향하여

'소녀상'은 집단경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서사가 응축된 '기억의 장소'

- 남한 사회에서 '위안부'는 1990년대 이전 '애국적 무관심' 한편에서 문학과 영화의 대중 서사에서 가학적이고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소비되었다.
- 2000년대 중반 '위안부' 표상은 성인 여성에서 소녀 또는 할머니로 전환했다. 성폭력 재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채 주먹을 쥐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의 상징이 되었다. 임신한 여성이나 단발머리 소녀 등 여성의 신체가 적국의 범죄를 고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선전 수단이 되는 것처럼, 소녀상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무고한 희생자 프레임에 적합하기 때문에 희생자로서 여성을 부각시키고 보호해야 할 소녀를 지키지 못한 분노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표상이 되었다.” (허윤, 2018)

위안부 고통의 '민족주의적 도구화' 비판

- 남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두 기둥은 탈식민 민족주의와 보편적 여성인권. 그러나 현실에서 이 문제는 반일감정에 호소할 때 대중의 열렬한 반응을 얻는다.
- 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하며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대학생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수용소 인권 문제에는 무관심. “갈라진 사회”(gespaltene Gesellschaft)인 남한에서 위안부 문제는 모든 세대와 집단을 집결시키는 위력을 발휘 (Die Tageszeitung, 2017년 9월 18일자)
- '위안부' 기억은 왜 한반도에 남은 그 역사적 유산인 미군과 한국군 위안부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해외의 '소녀상' 설치 현상은 위안부 기억의 “탈영토화”와 연대의 (불)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

- 위안부 피해 서사(한국의 반일 민족주의 비판과 연합군 전시강간 피해 서사(독일)의 가해자 피해자 전도 비판은 경험과 기억의 집단화를 위해 선택된 방향성을 수정하려는 시도.
- 포스트 미투 시대 '위안부' 운동은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공명하여 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의 전위운동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 독일에 위안부 기념물 설치의 행위 과정과 결과물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독일인과 유럽인이 연루된 전시 성폭력에 대한 기억과 성찰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난의 기억과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기억의 지구적 연대를 향하여

'소녀상'은 집단경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서사가 응축된 '기억의 장소'

- 남한 사회에서 '위안부'는 1990년대 이전 '애국적 무관심' 한편에서 문학과 영화의 대중 서사에서 가학적이고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소비되었다.
- 2000년대 중반 '위안부' 표상은 성인 여성에서 소녀 또는 할머니로 전환했다. 성폭력 재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단발머리를 한 채 주먹을 쥐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의 상징이 되었다. 임신한 여성이나 단발머리 소녀 등 여성의 신체가 적국의 범죄를 고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선전 수단이 되는 것처럼, 소녀상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무고한 희생자 프레임에 적합하기 때문에 희생자로서 여성을 부각시키고 보호해야 할 소녀를 지키지 못한 분노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표상이 되었다.” (허윤, 2018)

위안부 고통의 '민족주의적 도구화' 비판

- 남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두 기둥은 탈식민 민족주의와 보편적 여성인권. 그러나 현실에서 이 문제는 반일감정에 호소할 때 대중의 열렬한 반응을 얻는다.
- 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하며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대학생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수용소 인권 문제에는 무관심. “갈라진 사회”(gespaltene Gesellschaft)인 남한에서 위안부 문제는 모든 세대와 집단을 집결시키는 위력을 발휘 (Die Tageszeitung, 2017년 9월 18일자)
- '위안부' 기억은 왜 한반도에 남은 그 역사적 유산인 미군과 한국군 위안부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해외의 '소녀상' 설치 현상은 위안부 기억의 “탈영토화”와 연대의 (불)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

- 위안부 피해 서사(한국의 반일 민족주의 비판과 연합군 전시강간 피해 서사(독일)의 가해자 피해자 전도 비판은 경험과 기억의 집단화를 위해 선택된 방향성을 수정하려는 시도.
- 포스트 미투 시대 '위안부' 운동은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공명하여 트랜스내셔널 페미니즘의 전위운동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 독일에 위안부 기념물 설치의 행위 과정과 결과물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독일인과 유럽인이 연루된 전시 성폭력에 대한 기억과 성찰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난의 기억과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